

“재외동포, 한국 발전상 국외교과서 수록 적극 참여해야” 재외동포청, 8일 정책 수립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지적

-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 발전상을 국외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은 재외동포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고 동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.
- 장태한 미국 UC 리버사이드대 교수는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이 8일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에서 열린 ‘국내·외 동포정책과 정체성 함양’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.
- * 재외동포청은 이날 ‘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개 토론회’를 열어 국내·외 동포사회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. 범정부 중장기 재외동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.
- 장 교수는 “각국의 재외동포가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와 교사,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발전상 수록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- 임영언 재외한인학회 회장은 일본지역 차세대 동포들을 사례로 들면서 “교과서 기술과 함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와 역사,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”고 제안했다.
- 최미영 미국 다솜한국학교 교장은 “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동포사회와 재외동포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”는 의견을 냈다.
- 최병천 월드코리안신문 편집이사도 향후 국외 교과서 수록 문제는 재외동포가 주가 되고 재외동포청이 간접적으로 측면 지원하는 형태가 이상적일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.
- 홍경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총무국장은 동포사회의 공헌을

우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내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
- 토론회에서는 재외동포들이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지위를 향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.
 -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반중정서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내 인식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“현행 국적제도와 병역제도를 동포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 - 광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은 재외동포 체류자격(F-4 비자)이 거주국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데 대해 “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- 전문가들은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.
 - 조운정 태국 노바법무법인 대표이사는 “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 간에 정보 공유와 양방향 소통이 필요하다”고 지적했다.
 -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“재외동포정책 수립에 당사자인 재외동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 - 이상섭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위원은 온라인 세계한인 비즈니스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인 기업가가 상시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.

-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“재외동포와 국민,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재외동포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열띠게 토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”며 “이번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잘 모아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”고 말했다.
 - 한편 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’ (2024~2028년)은 2024년 1월(잠정)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.

담당	재외동포청	책임자	과장	최윤선	(032)585-3154
	재외동포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인재서	(032)585-3156